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 어디까지 왔나

# 민간시설 ‘아이없어’ 폐업 속출

## 구립시설은 지원받아 안정적이나 전체 10%불과

지난 94년 말 정부는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이하 확충계획)’을 발표했다. 95년부터 97년까지 총 1조3천여억원을 투입해 7천5백90개소(구립 3천1백50개소, 민간 3천개소, 직장 1천4백40개소 등)를 추가 신설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이 계획에는 또 96년과 97년 2년간 장애아와 유아 전담 보육시설을 1백50개소 신설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당시 29만 여명으로 30%에 그치는 보육율은 97년이면 42만7천여명을 추가 보육해 70%대로 오르게 된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새해업무보고에서 민간연금지급에서 1천5백억원을 끌어와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종교, 학교시설 등에 정부지원 보육시설 1천개소와 직장 및 민간보육시설 1천2백46개소 등 2천2백46개소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확충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1년6개월이 지난 현재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확충계획은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지난해 문을 연 2천1백개소(계획 2천2백개소)를 포함해 모두 3천1백50개소가 인가 또는 신고를 마쳐 11만7천여명의 아동을 추가 보육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또 올해에는 4천8백억원 정도를 투입자하는 한편 추진실적이 낮은 직장보육시설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해 연리 3-3.5% 장기



정부의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은 지역별 실태조사 없이 진행돼 심각한 수급 불균형 현상을 낳고 있다.

저리 용자를 지원,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보육시설 현장 관계자들의 얘기는 정부의 입장과 사뭇 다르다.

어 1년 안에 문을 닫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4천여개로 추정되는 서울지역 민간보육시설 가운데 1천여개는 항상 신설과 폐업을 반복하는 유

서 “조절기구가 없는 현실에서는 자치구에 따라 조사를 토대로 지원폭을 결정하는 등 자기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의 책임을 늘리지 않겠다는 방침 또한 수정돼야 할 대상이다. 정부는 보육사업 지침을 통해 구립시설에 한해 교사인건비 40만원씩을 지원키로 하고 민간시설에는 교재교구비 명목으로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다. 시설 설치에 있어서는 민간기금을 활용해 투융자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방침은 운영비의 80% 이상이 인건비로 지출되는 민간시설에는 그림의 떡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서소장은 “신설된 보육시설 가운데 구립 등 지원시설은 10%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결국 민

간시설을 수익성 사업으로 유도해 보육료 인상을 불가피하게 하는 것은 물론 기반 자체를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실제로 교사인건비를 1백% 지원한다는 장애아나 유아 전담시설의 경우도 시설지정 기준이 40명 이상이어야 가능하도록 돼 있을 정도로 비현실적

이다. 때문에 아동수에 따른 적정 지원액이 정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역별, 소득별 보육아동 대상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적정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서서히 자리를 잡기 시작한 확충계획을 보다 내실 있는 정책으로 자리잡게 할 것이다.

(손정미 기자)

### 수급 균형 위한 실태조사 절실

### 아동수에 따라 지원액 정해져야

시설의 50% 이상이 서울, 인천 등 6대 도시에 집중돼 있고 정작 보육시설이 절실한 저소득층 지역이나 농촌지역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시설이 편중돼 있는 대도시 는 대도시대로 공립시설에는 아동이 넘쳐 ‘보육의 질’이 우려되고, 민간시설은 ‘아동이 없

동적인 숫자라는 것이 한 현장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같은 결과는 확충계획이 애초부터 보육아동 현황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정확한 실사없이 추진되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많다.

한국보육정보연구소 서정은 소장은 “정부의 확충계획은 한 마디로 융통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실적위주의 정책”이라면